

“수능개편안 마련에 현장교사 참여를”

김승환 교육감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 철학과 의지를 교육부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 비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21학년도 적용 예정이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능 등 교육개혁 전반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교육부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능, 대입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교사인데도 수능 개편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교사에게는 묻지도 않았다”면서 “(교육부 관료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모

든 것은 우리가 해낸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의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한 뒤 수능은 기존 2009 교육과정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김 교육감은 “수능개편에 대비하는 교사 전문가 TF가 진작 구성됐어야 하고 교육적 폐 청산 TF도 이미 구성됐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기껏 나오는 말이 국정교과서 TF다”라며 교육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해은 기자

추미애 “북미-남북 대화 추진” 제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 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신세대 평화론’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환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추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3 제주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그는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페라 부르고 싶다”며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 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도 제안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보유세 도입 등도 촉구했다.

또한, 추 대표는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의 진행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뉴스



대검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반발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검찰총장과 면담을 미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文대통령, 아베와 통화... 北 핵실험 대응 논의

文 “대북압박 최고도로 끌어올려야”...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다. 두 나라가 공조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지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분 동안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실험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들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규모와 성격면에서도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

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일이 공조하면서 북한에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과거 핵실험보다 몇 배 더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신탄 장착 실험이라 주장하는 등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 통화에서 대

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있어 수단으로서 대화를 강조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제재 수준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이나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등이 실제로 남아 있는 방법들”이라면서 “그것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다. 두 정상은 앞서 ▲8월30일 ▲8월25일 ▲8월7일 ▲5월30일 ▲5월11일 등 5차례 정상통화를 가졌다.

/뉴스

김장겸 MBC 사장 “5일 출석 하겠다”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는 5일 고용노동부 조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노조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체포 영장 집행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찾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직원 5명에게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집행관 5명은 김 사장이 회사에 출근한 사실 등 소재를 파악한 뒤 MBC 본사 14층 사장실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집행관들에게 “내일(5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관들은 통보를 받고 철수했다.

김 사장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적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일단 내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 일환으로 총과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며 “오늘 고용노동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언론노조 MBC 본부의 총과업 출석식에 맞춘 시국”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측은 김 사장 측이 자진 출석키로 한 데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도 했다. 4일 김 사장이 출석하는 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통보한 대로 오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4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최근 MBC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전환, 전·현직 경영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날 MBC 본사 로비에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과업 출석식을 열었다. 이 자리엔 MBC노조 등 전국언론노조 조합원 약 1000명(노조 측 추산)이 참가했다.

/뉴스

김관영, 중증환자 보험료 세제지원 확대방안 발의

고액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한 중증환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휘청이는 환우 가정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1일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세법상 자조적 사회보장 독려 차원에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고가의 진료·치료비가 불가피한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계에는 세액공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문명과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세법은 또 하나의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김진성 기자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